

코로나 4차 대유행...재난지원금 다시 하위 80%에 무게?

고강도 방역 예상 못한 상황 산정
1인당 25만원서 깎일수도
전염성 높은 대면 소비 장려 문제
대권주자들 2차 추경 재검토 요구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80%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10조4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앞서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5월에 거둔 세

금이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에선 2차 추경을 짤 당시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악화한 만큼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추경 재원은 33조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4단계 격상에 따른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제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을 더 많이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안에는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은 7~9월 석 달간 월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현재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산정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금액이 커지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보다 더 줄이거나, 80%로 유지하되 1인당 지원금액을 줄이는 방안까지 거론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전염 위험을 높이는



코로나 대응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장관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면 소비를 장려하는 측면 역시 문제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전 국민에 소비 진작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 제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차 추경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불행히도 국민이 바뀌었다.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80%나 100%나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고 가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밀가루 반죽인가” vs “과감히 개편해야”

여야, 이준석발 ‘작은정부론’ 논쟁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부처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작은 정부론’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교 업무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것은 비효율적 수 있다”며 통일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에 비유하자 “외교의 큰 틀 안에 통일이 있는 것”이라며 “해경이 외교부라면 (통일부는) 서해 전담 해경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업무조정도 필요하다고 “치을 때 과감히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덧붙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행정 각부를 통폐합해 현재 18개 부처를 10여 개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복잡한 부처 이름을 단순화하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개편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남북 관계의 역사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교부 존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정부

조직이 국민의힘 마음대로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나”라며 “이 대표는 결국 극우 ‘박사모’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도 반박했다. 전해숙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주장은 우리 사회를 이념과 성으로 갈라치기 해 분열시키고 이용하려는 정치 전술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더 역할을 강화해야 할 여가부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불순한,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 윤리심판원, 양향자 의원 제명 할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사촌의 성범죄와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사고 있는 양 의원에 대한 12일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양 의원 사촌이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민주당 서구을지역위원회 다른 당직자 A씨도 제명되면서

양 의원의 ‘제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된 ‘성범죄 신고에 따른 조치 미비, 2차 가해, 피해자 회유 여부, 가해자의 2차 가해’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양 의원은 직접 윤리심판원에 참석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 “양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12일 윤리심판원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지난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양 의원의 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를 제명 징계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는 일부 언론 기사 등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한 여직원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를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대선 준비...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당내 경선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대선 예비경선 기탁금(1억원)과 비교하면 경선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예비 후보 등록은 12일부터 시작한다. 경선위 산하에 기획위원회와 검증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기

획위는 경선 흥행을 위한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검증위는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준위는 불협화음 없이 경선을 치르고 다채로운 비법밥 고명 같은 후보들이 모여 멋진 모습을 선보이게 하는 역할”이라며 “우리가 야권의 중심이라는 당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기획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강은미 “대학 방역인력 예산 학교당 5명 수준”

지난 6월 24일 정부는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방역인력 지원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4억6800만원이다. 대학의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건물별 출입관리, 체온 측정, 일상 소독,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대학의 방역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은 총 2천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업 대상은 대학 199개교, 전문

대학 133개교, 대학원대학 42개교 등 374교로, 학교당 배정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5명 내외에 불과했다. 강은미 의원은 “추경안을 처음 보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대학의 2학기 대면 활동 확대방안을 발표해놓고 방역인력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이라니 기가 막혔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캠퍼스가 학생과 교직원으로 붐비게 될 것인데 학교당 5명의 지원인력으로 원활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

010-8660-9801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천)

2) 월수익 30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

010-6670-9800